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7.08(금) ~ 2022.7.14(목)

제공일시 2022 07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7.08(금) ~ 2022.7.14(목)

제공일시 2022 07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60% 육박하는 EU... 국내는 아직 걸음마

-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는 돈을 주고 탄소배출권을 사는 유상할당 비중을 60%까지 늘리며 탄소감축의 핵심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지만, 국내는 아직 거래 활성화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임
- 우리나라는 EU에 비해 10년이나 늦은 2015년에 ETS가 출범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국내 ETS는 시장 규모가 작고 여기에 현물 거래만 허용되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에선 선물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급격히 몰리거나 빠졌을 때 가격이 급등락하는 현상도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데일리, 2022.07.12) 박민 기자
<http://www.edaily.co.kr/news/esi?newsid=1127493239384&medCd=Hw-2170&utl=034>

2.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 2024년부터 도입

- 2024년부터 구글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이 기업 본사 소재지 국가뿐만 아니라, 그들의 서비스나 상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야 함
-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작성한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공개하고, 내달 19일 까지 서면 공청회가 진행된다고 밝혔음
- A기업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한 뒤, 중국에서 이 반도체를 이용해 만든 휴대폰을 미국에 수출하면 A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함
-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 넷플릭스 등 5개 해외법인의 국내 세금은 2229억원을 추산되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외시장 소재국에 디지털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임

(문화일보, 2022.07.12) 박정민 기자
<http://www.mh.com/news/tech/20220712/1313528701>

(한국일보, 2022.07.12) 변태섭 기자
<http://www.kookilbo.com/utl/6/newsapp/4500002711348-20220712>

3. 제2의 무역장벽, '플라스틱세' 다가오는데... 이제 팔 걷는 한국

- 기후위기 청구서인 탄소국경세에 이어 '플라스틱세'가 제2의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음
- 오는 2024년에는 플라스틱 규제 국제협약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인 한국의 수출품 가운데 플라스틱이 쓰이지 않는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단 점을 고려할 때, 선형경제 DNA를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할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새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 보고서를 보면, 이날 참석한 폐기물처리업체, 중화학 기업, 재활용업체 등이 요구한 정책은 공통적으로 '수거·선별의 인프라 개선'이 꼽아 향후 개선 과제로 주목 받고 있음

(이데일리, 2022.07.12) 김경은 기자
<http://www.edaily.co.kr/news/esi?newsid=1126493239384&medCd=Hw-2170&utl=034>

1. ESG 신용등급 평가 깎였어... 발전·건설사 유탄 맞나

-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평가 방식이 환경과 사회 부문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 석탄 발전과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음
- 최근 신용평가사들은 강릉에코파워와 삼척블루파워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했는데, 작년 상반기에 '부정적'인 꼬리표가 달린 이후 올해 신용등급에 반영된 것임
- 강원도 삼척에 1천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는 작년 6월 1천억원의 자금 조달 전망 미매각, 올 4월 회사채 1800억 모집에도 투자수요가 전무했음
- 신용평가 3사는 연이어 붕괴사고를 낸 HDC산업개발의 신용등급을 올해 'A+'에서 'A'로 강등했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 검토' 명단에 올렸음

(연합뉴스, 2022.07.12) 박준형 기자
<https://news.entra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3314>

2. EU, 클린테크 탈탄소화 프로젝트에 18억 유로 투자

- EU집행위가 17개 대규모 클린테크 프로젝트에 18억 유로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음
- 이번 보조금은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구현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금 프로그램 중 하나인 'EU 혁신 기금'에서 지급됨
- 이번 보조금을 통해 EU는 녹색수소, 폐기물 수소화, 해상풍력, 태양광 패널 모듈 제조, 배터리 저장 및 활용, 탄소포집 및 저장, SAF(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첨단 바이오연료 등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스웨덴 최초의 메탄올 플랜트, 불가리아 최초의 풀 체인 CCUS 시설, 흑해의 해상 가스 영구저장시설과 CO2포집을 연계한 시멘트 공장 등이 있음

(ESGToday, 2022.07.13) Emanuela Kerencheva 기자
<https://www.esgtoday.com/eu-invests-e1-8-billion-in-clean-tech-decarbonization-projects/>

3. “EU 저탄소 정책 고수... 한국도 관련 투자 주목해야”

- 유럽연합(EU)이 에너지 위기에도 저탄소 전환 정책을 고수하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관련 투자가 주목되고 있음
- DB금융투자는 8일, 한국의 높아질 탄소 배출 비용 부담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또,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피어 대비 매출 단위당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탄소효율 그린뉴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추천했음

(이데일리, 2022.07.08) 김보겸 기자
<http://www.edaily.co.kr/news/index.html?newsId=0156128663282527&mediaCodeNo=257820&trk=V>

1. 블룸버그 조사, 금융회사들은 아직 기후리스크 통합 초기단계

- 블룸버그는 현재 금융회사 상당수가 기후위험을 보다 광범위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에 통합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힘
-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금융 업계에서는 기후 리스크 중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고 매우 적은 수의 기업들만이 기후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고급단계에 속해있음
- 블룸버그는 지난 5월 전 세계 금융서비스 회사 140명 이상의 리스크 전문가와 리더를 조사했는데, 85%의 기업들이 기후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개시했지만 절반 미만이 계획 단계를 넘어섰음
- 또 탄소와 지리 위치 및 기상데이터를 포함한 변수를 바탕으로 다중 시나리오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등 고급단계에 있다고 보고한 곳은 20곳 중 한 곳뿐이었음

(ESGToday, 2022.07.11) Mark Segal 기자
<https://www.esgtoday.com/blumbergsurvey-financial-firms-lack-progress-commissioning-digital-tools-climate-risk-analysis/>

2. IEA “태양광 모듈 80%가 중국산… 공급망 다원화해야”

-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제기됨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80%를 넘어섰다고 발표하며 중국의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점유율이 수년 뒤 95% 이를 것으로 예측함
- 파티 비를 IEA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대응해야 할 잠재적 과제”라고 지적하며, 생산거점 다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뉴스핌, 2022.07.11) 구나현 기자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711000943>

3. “탈탄소 앞당기자”… 업종 불문 ‘재생에너지’ 전환 사활 [헤럴드뷰]

- 탈(脫)탄소를 실현하는 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면서, 전 업종에서 탈탄소 속도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
- 삼성전자는 지난해 5278GWh(기가와트시)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사용량을 전년 대비 31.0% 가량 늘렸고, LG전자는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를 제시함
- 롯데케미칼은 국내 석유화학업계 최초 RE100 가입 노리고 있고 한화솔루션은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탄소배출량의 70% 이상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힘

(헤럴드경제, 2022.07.08) 문영규, 원호연, 주소현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708000432>

4. 지수 퇴출에 과징금까지, ‘정보보안’ 재계 ESG 주요 이슈로

- 개인정보 유출, 해킹과 같은 정보보안 사고가 기업 ESG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음
- 정보보안의 중요성은 글로벌 ESG 정보공개 표준, ESG 평가에서도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통신·IT 등 관리할 고객 데이터가 많은 업종에서는 핵심 ESG 아젠다로 자리 잡음
-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MSCI에서도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을 사회 영역 주요 지표로 두고 현재 통신 서비스, 금융, IT 분야 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

(데일리임팩트, 2022.07.13) 박민석 기자
<https://www.dailyimp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57>

1. 대한상의, 체계적으로 ESG 이슈 대응한다… 업종별 ESG 워킹그룹 회의 개최

-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제1차 업종별 ESG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했음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제약·바이오·유통 관련 주요기업 실무자와 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ESG 이슈가 산업섹터별로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음
- 대한상의는 국내 20대그룹을 중심으로 'ESG어젠다그룹'을 구성해 경제계 소통과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협의체로 활발히 운영하는데, 업종별 실무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업종별 워킹그룹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 이번 워킹그룹은 △식품, 제약·바이오, 화장품, 유통·물류 △에너지, 석유화학, 중공업 △IT(반도체, 전기전자, 정보통신) △자동차, 철강 △금융 등 5개 업종으로 구성됨

(열린뉴스통신, 2022.07.11) 심은혜 기자
<https://www.z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426>

2. 지속가능성 핵심 'LCA' 뒤풀래…화학업계 최대 관심사 부상

- 최근 석유화학업계를 중심으로 제품제조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정량화하는 기법인 LCA(전과정 평가)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음
- LG화학은 연내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LCA를 구축할 계획 공개하며, 2023년까지 해외에서 생산하는 전 제품에 대한 LCA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음
-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현대오일뱅크 등 굴지의 석유화학·정유기업들은 LCA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최근 LCA 전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등 관련 조직과 역량을 확대하고 있음
- 최근엔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과 현대차·기아 등 자동차업계까지 LCA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머니투데이, 2022.07.15) 최민경 기자
<https://news.mt.co.kr/mbview.php?no=2022071417211697210&oid=14ef9b39b2f92f>

3. 공급망위기 해소·탄소중립 목표, '자원순환'에 주목하는 기업들

- 국내 기업이 자원순환 관련 사업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활발한 투자를 보이고 있음
- 고려아연은 미국의 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기업 이그니오홀딩스 지분 73%를 인수하기 위해,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홀딩스에 약 4324억원의 자금 출자를 결정함
- LG화학은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을 본격화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나섰다

(서울와이어, 2022.07.12) 정현호 기자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563>

4. '탄소를 잡아라' CCUS에 빠져드는 산업계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 받고 있음
- 현재 CCUS 분야는 북미 지역과 EU 국가들이 주도. 우리 산업계도 CCUS에 주목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전 세계 CCUS 시장의 규모가 2020년 16억1570만 달러에서 2025년 35억 4230만 달러까지 성장한다고 추산함

(국민일보, 2022.07.09) 황인호 기자
<http://news.kmb.co.kr/infobview.asp?ac6=0072046&code=014111&grn>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7.08(금) ~ 2022.7.14(목)

제공일시 2022 07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미 상원에서 흔들리는 기후 법안...정부 아닌 투자자 주도 탄소 감축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와

- 미국 민주당의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이 미국 경제정책 ‘더 나은 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BBB)’에 반대하면서 미국 기후 정책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음
-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현지언론은 17일(현지시각) “조 맨친 의원이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 (Chuck Schumer)에게 자신은 기후변화 지출, 기업과 부자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민주당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함
- 맨친 의원이 반대하는 BBB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경제정책으로, 코로나19 구호 법안, 인프라와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법안, 육아와 노후 복지를 위한 법안으로 구성됨. BBB 법안에는 태양광, 풍력발전 세제 지원, 전기차 구매 보조금 등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 포함돼 있음. 법안 이행을 위한 2조달러(약 2600조원)의 예산은 기업이나 고소득층 증세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 전에 세금과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희망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똑같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중도파 조 맨친 의원이 법안 통과에 ‘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1년째 계속됨. 이 와중에 BBB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조 맨친 의원의 발언은 올 여름 의회가 주요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꺾은 셈임
-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상원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국내 청정 에너지 산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깨끗한 에너지 미래를 건설할 기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고 밝히며, 의원들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함
- BBB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바이든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에 의존해야 함. 그럴 경우 기후변화는 다음 행정부에 의해 뒤집힐 수 있음. 잠재적 행정 조치로는 연방 토지에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는 것을 억제하고 발전소 배출에 대한 새로운 환경보호청의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포함됨
-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최소 50% 줄인다는 바이든의 약속을 훨씬 밀돌고, 불과 24%에서 35%의 감축을 달성할 것이라고 로듐 그룹 (Rhodium Group)의 연구원들이 이달에 발표함
- 일부 환경단체들은 대통령에게 원유 수출 금지 조치의 부활과 같은 국가긴급사태법에 따라 국가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요구함. 또한 환경단체들은 바이든이 환경청에 온실가스에 대한 국가적인 제한을 설정하도록 지시하고 내무부가 새로운 석유와 가스 리스를 중단하고 공유지와 수역의 석유와 가스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함
- 그린피스 USA의 수석 기후 운동가인 애슐리 톰슨(Ashley Thomson)은 “맨친 의원이 기후 입법에 반대하자 대통령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으며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함

(임팩트는, 2022.07.18) 홍명표 기자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545>

(임팩트는, 2022.07.18) 양윤혁 기자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550>

- 한편 미국의 환경 관련 법안 제정이 오랜 시간 지체되면서 투자자 주도의 탄소 배출 감축이 필요하다는 업계 책임론도 제시되고 있음
- 에너지 분야 자산 운용사인 김메리지(Kimmeridge)의 관리 파트너인 벤 델(Ben Dell)은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 산업은 얼리어답터(early-adopter)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변화에 이끌려 다녔다"고 말함
- 김메리지가 발표한 보고서는 업계 자체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자본을 탄소 배출 감축에 재투자하는 모습을 보인 최근 업계의 양상은 기업이 원하면 스스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임
- 미국의 석유회사인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의 2021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제시된 탄소 배출 감축에 관한 비용의 손익분기·추정치에 따르면 연간 약 60만 톤 이상의 탄소 감축을 기점으로 회사의 이익은 증가세를 보임. 이는 화석연료 기업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 감축의 동기가 있다는 것임
- 김메리지는 투자자금이 석유와 가스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큰 실수라고 주장하며, 친환경에 대한 투자 유치를 지속하고, 넷제로 전환에 앞장서는 기업에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임